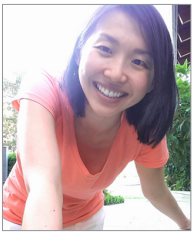


외신이 바라본 평창의 ‘환경올림픽’



윤지혜

자유기고가

스포츠사회학 / 환경사회학, 환경정치학 전공

환경사회학에 관심

liv.yoon@ubc.ca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이 막을 내렸다. 자칭 환경올림픽이라 했던 평창올림픽, 영어권 외신(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올림픽(스포츠 메가이벤트)과 환경오염

환경올림픽에 관한 언론보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올림픽(및 여러 국제 메가 이벤트)과 환경오염의 관계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20세기 들어 산업 발전과 공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생물 생존 환경의 악화, 그리고 1980년대 말의 기후변화 기정사실화 등의 이유로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포함한 여러국가 및 NGO 단체기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UN Agenda 21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재정의하였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일으킨 행사라는 비난을 받은 후 IOC는 1994년 환경을 문화와 스포츠에 이어 올림픽의 세 번째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더불어 1999년에는 UN의 'Agenda 21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본떠 'Olympic Movements' Agenda 21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발행했다.

올림픽 개최에 환경악화는 불가피하다. 비록 폐전자제품의 회로기판에서 금속을 추출해 메달을 만들거나 활용 가치가 없어 버려진 목재를 재활용해 경기장을 세우는 등 다양하고 창조적 노력을 하는 추세지만 불필요한 시설 건립 (사후 활용/유지에 드는 돈 및 탄소배출) 및 선수단, 관객 비행운송 등의 '어쩔 수 없는' 조건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다.

IOC는 '지속가능성 및 유산 위원회' (Sustainability and Legacy Commission)를 세우고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환경

파괴적 영향에 대해 받은 부정적인 관심에 대응했으나 이들의 실제 영향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큼 불충분하고 단지 상징적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¹⁾ 물론 개최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아 '그린올림픽', '환경올림픽', '저탄소/제로탄소 올림픽'등의 슬로건을 걸고 보다 환경 친화적 제품과 기술 도입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개최가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기술도입의 예로 여러 개최도시들은 탄소배출 상쇄 시스템으로 사용한만큼 에너지를 만회하는 방안을 쓰고 있다. 이는 크게 세가지로 분리된다. 첫째, 친환경 건물 짓기, 쓰레기 줄이기, 저탄소 수송시스템, 풍력 에너지 발전 등 의 '직접감축'. 둘째, 국내지자체나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여서 얻은 기부권을 받아 감축하는 '기부감축'. 셋째, 그야말로 오염할 권리를 돈으로 사는 '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 [CER] Credits)' 구매 방법. 이렇게 사용한 에너지만큼 만회하는 방법들은 '생태학적 현대화' (Ecological Modernization [EM])라는 패러다임에 걸맞는 시스템이다. EM이란,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재편하는 것'²⁾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말해, 지금의 생산소비중심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물음표를 던지거나 전혀 다른 종류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술발전을 통해 경제적 및 환경적 발전 둘 다 얻을



출처: Partner Productions

1) Wilson, B. (2012). *Sport & Peace: A Sociological Perspective*. Don Mills, ON: Oxford University Press.

2) Hajer, M. A. (1995).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xford: Clarendon Press.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구축한 프로세스를 일컫는다³⁾. 이처럼 EM은 대기업 후원을 받는 올림픽으로선 매우 유용한 자본주의 경제정치 패러다임이다.

EM (생태학적 현대화)논리는 이론적으로는 스포츠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접근으로 보이지만 문제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첫째,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과 교차 부문 협력에 집중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⁴⁾. 둘째, 환경을 보호하고 좋은 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공생적이라는 생각, 그리고 환경의식이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이 문제다. 국민들을 ‘사회의 중개인’ 보다 지갑으로 소통하는 ‘소비자’로 여긴다. 즉, 금융자본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화 및 언어가 된 것이다⁵⁾.

올림픽, 환경, 언론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의식의 주요한 의제가 되는 추세에 걸맞게 올림픽 및 국제스포츠이벤트관련 언론보도에도 환경에 관한 내용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언론은 대중이 메가스포츠이벤트와 환경적 영향에 대해 알게 되는 가장 지배적인 매커니즘 중 하나다. 한 이슈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형성하는데 있어 언론의 선정방식, 해석, 보도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신이 바라본 평창의 ‘환경올림픽’을 되짚어 본다.

평창의 환경올림픽에 대한 관심?

2011년 1월 1일과 2018년 4월 10일 사이에 발행된 영어권 주류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평창의 환경이슈에 대한 기사를 구글 뉴스 검색을 통해 30개의 기사를 모았다. 수많은 올림픽 관련 기사 중 환경올림픽을 중심으로 다룬 기사가 30개 남짓 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국제적 행사에 있어 환경이슈가 아직 그만큼 주목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한다. 2014년 ‘Inside the Games’의 보도를 시작으로 2015년 여름까지 4개의 기사가 띄엄띄엄 보도됐다. 그러다 2015년 9월 영국 가디언지가 처음으로 가리왕산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두 달 동안 다른 외신에서 보도된 가리왕산 기사가 9개에 달한다. 이후 2016년에 2개, 2017년 1개, 그리고 나머지 13개는 2018년 올림픽 개최 전과 개최 기간 동안에 쓰여졌다. 중앙일보의 “문제 없는 게 문제” 외신 호평...평창올림픽이 던진 메시지는⁶⁾, 그리고 서울신문의 ‘외신기자 10명 중 9명 “평창올림픽 성공적”⁷⁾과 같은 핑크빛 보도와 다르게 평창올림픽의 환경 측면에 대한 외신의 시선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그리고 위커스 같은 진보언론에서는 비판의 시선이 꾸준히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좋은 예로 위커스 김한주 기

3) Chernushenko, D., van der Kam, A., & Stubbs, D. (2001). *Sustainable Sport Management: Running an Environment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Responsible Organization*. Nairobi, Kenya: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4) Gibbons, R. (1999). Questions about a gift horse. In R. Gibbons (Ed.), *Voluntary Initiatives and the New Politics of Corporate Greening* (pp. 3–12). Peterborough, ON: Broadview Press.

5) Lubbers, E. (2002). *Battling Big Business: Countering Greenwash, Infiltration and Other Forms of Corporate Bullying*. Monroe, ME: Common Courage Books.

6) 김원. (2018.02.06). “문제 없는 게 문제” 외신 호평...평창올림픽이 던진 메시지는. 중앙일보. news.joins.com/article/22395820

7) 임주형, 한재희. (2018.02.23). ‘외신기자 10명 중 9명 “평창올림픽 성공적”’. 서울신문.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3500124#csidx74e7aa841062c5da390439369b97989

자의 기사를 꼽을 수 있다.) 외신들은 ‘환경’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로 비판하기 보다는 주로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건설에 대한 논란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테마들을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가리왕산은 생태적 이슈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건설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기사들은 경기장 건설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많은 기사들이 주목했던 점은 약 6만 그루의 나무가 단 1주일간의 경기를 위해 베어나간다는 점이었다. 국내 환경단체 슬로건에서 제시된 ‘500년 (된 원시림) vs. 3일 (의 경기)’를 빌려 단 며칠간의 경기를 위해 오래 보존됐던 숲이 파괴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계 파괴에 맞췄던 초점을 시작으로 가리왕산 건설은 결코 환경문제 만이 아니라는 관점을 과시했다. The New York Times 와 USA Today 는 가리왕산 건설로 인해 이주해야했던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한국에선 잘 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사정을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 와 ‘이주하는 과정에 많은 불편함과 시련이 있었다’ 등의 이주민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동시에 여러방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지적들은 대부분 가리왕산 건설을 원했던 이들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올림픽 레벨 선수들이 뛰는 경기라 기존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했을 ‘투런 규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나다 CBC방송은 “우리는 경기를 치르면서 자연을 파괴하기는 싫다. 2주간의 경기를 위해 산을 깎을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답한 전 올림픽 스키선수 Jean-Luc Brassard 의 의견을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가리왕산과 같은 이슈에 개입하는걸 원치 않지만 만약 ‘보호지역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좀 더 레벨이 떨어지는 곳에서 경기하는것이 괜찮겠느냐’라고 묻는다면 95% 이상이 ‘당연히 그렇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상장이 되고 싶지 자연을 파괴하는 상장이 되고싶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를 하러 온 것이지 최고급 빌딩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도는 “세계최고의 선수들을 위해 세계최고의 경기장을 지어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거듭된 주장을 되돌아 보게 하는 대목이다.



원래 집과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에게만 이주할 권리가 주어졌던 숙암리의 이주단지. 평생을 숙암리에서 살았던 노인 세명도 집이 자식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집을 싸게 되었다.

조직위원회가 환경올림픽을 위해 하는 행동과 만드는 결정에 대한 지적과 칭찬

물론 평창의 환경올림픽 구상을 칭찬하는 기사들도 있었다. Mother Nature Network 는 조직위원회가 탄소 상쇄, 온실 가스 배출, 대기 질과 수질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정보와 노력을 보여주는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칭찬했다. 이러한 ‘투명성’은 특히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비해 돋보이는 지점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비판적인 톤이 강했다. IOC의 환경 지속가능성과 보호에 대한 PR캠페인에 지적도 있었다. 올림픽 마다 더 강해지는 ‘그린올림픽’ 메시지에 모순되게 IOC는 자신들의 캠페인에 반대되는 행동만 하고, 또는 개최국의 환경정책 처사에도 방관만 하는 모습에 비판을 가했다. 이 내용은 Inside Climate News에 실린 기사였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언론사가 관심을 보였다.

평창에 대한 비판을 부각시키기 위해 예전 올림픽의 사례를 예를 드는 경우도 많았다. The New York Times 기사는 2016리우 올림픽을 위해 ISO 12121 환경친화적빌딩 인증을 받은 많은 시설들도 이제 쓸모가 전혀 없는, 소위 “흰 코끼리 경기장”으로 변했고 이것은 아무리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지속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창의 환경레거시는 2014년 소치 겨울 올림픽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지만 이에 만족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리왕산 복원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다. Jacobin에 기고한 Jules Boykoff 올림픽 전문 스포츠사회학 교수는 나무를 더 심는게 복원계획의 대부분인것을 언급하며 “묘목 몇그루를 심는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생물다양성으로 가득찬 숲이 되돌아 오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생태학적 현대화(EM)의 우려사항과 일치한다. 예를들어, 나무를 심어 다시 원시림을 복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류의 기술발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지나친다는 점을 가르킨다. 다른 예를 들자면, 화석 연료를 캐내고 사용하는 기술 발전 속도는 혁신적이지만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속도는 느리다. 인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0년 BP회사의 Deepwater Horizon기름유출 사고 후 구멍을 막을 대처방법이 없어 맹목적 신앙처럼 골프공과 찢어진 타이어를 바다속으로 던진 예를 생각해보라).

평창에서 벗어나

외신보도는 평창의 지리적, 행사적 틀에서 벗어나 올림픽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기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올림픽을 치르기 전과 치르는 중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개최나라 조직위원회가 모든것을 책임질 듯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하지만 이 두 조직들은 결국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Jacobin에 실린 기사는 올림픽이 ‘파산사업모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IOC는 사후에 책임이 전혀 없기에 ‘너그럽게도’ 주최 도시들에게 부푼 꿈을 꾸게 하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인 도움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하게 Grand Stand Central 는 주최도시들에게 수백억을 쓰도록 강요하고, 경기후 필요 없는 시설들을 건설시켜 터무니 없는 액수의 빚을 지도록 하는 것에 질문을 던졌다. 이 기사는 자문자답형으로 올림픽

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이기는” 자는 결국 IOC라고 답을 했다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한 아끼면서 제일 많이 이득을 취하는 건 결국 IOC라고)

이처럼 외신은 IOC의 무책임성이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올림픽의 구조가 ‘환경올림픽’을 환상 속에 개념으로 머물게 한 지점을 꼬집었다. 조직위원회나 개최도시 또는 개최국가를 벗어나 올림픽 자체의 구조를 향해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맥락을 제공한 것이다.

‘무책임’이 있을 수 없게 우리가 지켜보아야 한다

많은 기사들은 이런 책임을 물을 기회나 구조가 없는 점을 이유삼아 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고도 가리왕산 관리를 더더욱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CBC방송은 “가리왕산 복원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나무를 다시 심고 지킬것이다”라는 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직원의 말을 상기하고 조직위원회와 약속을 지킬 책임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외신이 바라본 평창의 ‘환경올림픽’은 비판적이면서 현실적이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외신이 누구와 소통했는지 이다. 조직위원회가 내놓는 보도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이주민들 및 환경운동가등 더 힘없는 자들의 의견을 실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환경올림픽이라 해서 자연과학자들의 의견만 듣기보다는 환경문제는 곧 사회정치적 문제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사회학, 도시계획, 환경사회학 등의 전문가 및 교수들의 의견을 실었다.

또한, 눈여겨볼 지점은 평창의 지리적, 행사적 틀을 떠나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내용은 올림픽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선택여지 중의 하나라는 관점이다. 비교적 국내언론은 무조건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추정하에 기사들이 쓰였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안하기에는 아직은 올림픽이 나라발전에 기여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외신보도에는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 했다가 시민들의 압박으로 다시 철회했던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등의 사연을 전한 기사들이 많았다. 이러한 기사들은 올림픽 유치 및 운영 과정에 있어 모든시민의 동의와 참여, 또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강한 민주주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끔한 지적을 한 한국언론도 물론 많다. 외신은 국내언론사들보다 ‘엮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언론에서 나온 따끔한 비판의 시선에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 외신에서 보도된 모든 비판은 국내 시민, 환경운동가 및 전문가, 교수들이 수도 없이 했던 말들이다. 한국에선 어느 언론사이든 ‘나라행사’ (특히 올림픽)를 비판한다는 것은 (혹은 비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것은) 아직 불편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비판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